

#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56
----------	------

발의일자 : 2019. 8. .  
발 의 자 : 안 문 환 의원

## 1. 개정이유

우리 조례의 근거 법률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8. 1. 1.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과 중복 운영되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2017. 11. 28. 일부 조문이 삭제되는 등의 일부 개정이 있었던 바, 「자원순환기본법」을 우리 조례의 근거 법률로 새로이 삽입함과 동시에 두 개의 상위 법률을 구분하여 위임 근거 조문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규정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등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근거 법령에 「자원순환기본법」을 포함시켜 이를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근거 규정이 바뀔에 따라 해당 조문 개정(안 제2조 ~ 안 제4조)
- 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된 규정(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을 전부 삭제하는 등 해당 조문을 정비함(안 제6조 이하)
- 라. 삭제된 조문을 배제시키고, 전체 13개 조문을 7개 조문으로 정비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기타심사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자원순환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의2** 제1항 중 “법”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로 한다.

**제3조** 제목 중 “실행계획”을 “집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중 “법”을 “「자원재활용법」”으로 한다.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를 제6조로 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자원재활용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를 **제7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u>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u>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자원순환기본법</u> 」,----- ----- ----- ----- ----- -----.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u>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u>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생략)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u>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u> ----- ----- ----- -----. ② (현행과 동일)
제2조의2(재활용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u>법 제13조의2에 따라</u>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조의2(재활용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 <u>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u> 」 (이하 “ <u>「자원재활용법」</u> ”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동일)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u>실행계획</u> 수립·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u>집행계획</u> 수립·시행) <u>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u> <div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div> <div style="text-align: center;">&lt;삭제&gt;</div>
①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공헌한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자원재활용법」 ----- ----- ----- -----.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자원재활용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납부기한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은행 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삭제>
③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현행	개정안
<p>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p> <p>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삭제>
<p>제10조(과태료 수납부비치·관리)</p> <p>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삭제>
<p>제11조(준용규정)</p> <p>이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p>	<삭제>
<p>제12조(과태료의 귀속)</p> <p>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에 따라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삭제>
<p>제13조(시행규칙)</p> <p>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7조(시행규칙)</p> <p>-----</p> <p>-----.</p>

#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全文)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 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용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2조의2(재활용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재활용센터는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자원재활용법」 제31조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공헌한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협의회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자원재활용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원순환기본법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정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1. ~ 8. (생략)

### 제41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6.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1조(재판비용)** ① 과태료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①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한 금원(金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